

일본 TPP 추진의 정치경제: 일본의 국가정체성과 지역구상의 관점에서*

최 은 미**

요약

미국의 TPP 탈퇴 이후, ‘미국없는 TPP’의 효과와 지속추진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주변국의 우려와 달리 아베 수상은 ‘미국 빠진 TPP(TPP 11)’를 지속해 나갈 것을 공표하였으며, 2018년 1월 현재, TPP는 일본의 적극적·주도적인 역할 하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미일협력의 상징이었던 TPP에서 미국이 탈퇴한 이후에도 일본이 이를 적극적·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일본이 역내 주요한 교역 상대국인 중국이 아닌 미국과 경제협력을 추진하고자 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국가정체성과 지역인식, 지역구상의 변천을 국제정치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TPP 참가결정과 지속추진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일본의 국내외 경제·안보 이익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주제어: 일본정치경제, 국가정체성, 지역구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 본 연구는 2017년 아시아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초고(草稿)는 2017 현대일본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본 논문의 발전을 위해 세심하고,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철희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emchoi.0401@gmail.com

I. 서론

본 연구는 아베 정권의 주요 대외경제정책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을 사례를 통해 일본의 경제안보전략을 일본의 지역인식과 지역구상의 관점에서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TPP에서 미(美)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공식선언함에 따라 TPP의 추동력은 저하되었으며, ‘미국없는 TPP’의 효과와 지속 추진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하였다. 일본 내부에서는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졌고, 국제사회에서도 미국 없는 TPP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졌으며, TPP는 존폐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아베 수상은 ‘미국 빠진 TPP (TPP 11)’을 지속해 나갈 것을 공표하였으며, TPP는 일본의 적극적·주도적인 역할 하에¹⁾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CPTPP)’의 형태로 추진²⁾되고 있다. 대중국 압박정책이자, 미일협력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TPP에서 미국이 탈퇴한 이후에도 일본이 이를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일본이 역대 주요한 경제 교역 상대국인 중국³⁾이 아닌 미국과 경제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
- 1) 2017년 5월 30일, 아베수상은 주요 장관급 회담을 열고, “7월 일본이 주최하는 TPP 11 실무급 회담이 속도를 내려면 의장국인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7월 12일~13일 미국을 제외한 11개의 TPP 참가국(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멕시코, 캐나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칠레, 페루 등)들은 일본 가나가와현에 모여 실무협의를 하였고, 11월 11일 베트남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핵심요소에 대한 합의를 발표하였다.
 - 2)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이 이미 타결한 TPP의 핵심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유무역 블록을 결성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합의는 일본이 주도하였다(2017.11.11.).
 - 3) 최근 10년간 일본의 대(對)중국 수출량은 전체 수출량 중 약 20%에 달하여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다.

국가정체성과 지역인식, 지역구상의 변천을 국제정치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일본이 지역 내에서 스스로의 역할 규정을 어떻게 하였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TPP 참가결정과 지속추진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일본의 국내외 경제·안보의 전략적 이익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전후 형성되어 온 일본의 국가정체성과 지역인식 및 지역구상의 시기별 변천과정을 알아보고, TPP 참여와 지속 추진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아베정권의 지역인식과 지역구상을 파악해 볼 것이다. 그리고 아베정권의 대외정책 기조와 특징을 통해 대표적인 대외경제 정책으로서 TPP 참여 및 추진의 배경과 전개과정, 특히 미국의 탈퇴 이후 TPP 추진에서 일본의 역할에 대해 주목할 것이다. 미국 탈퇴 이후의 TPP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이와 같은 시도는 아베 시대의 일본과 미중경쟁의 격화 속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주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이다.

II. 일본의 지역인식과 지역구상

1. 일본의 국가정체성과 지역인식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란,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역사적 영토, 공통의 신화, 역사적 기억, 대중문화, 법적 권리 및 의무를 공유함으로써 생겨나는 집합적 정체성이자(Smith 1991, 14), 사회화과정을 통해 특정 집단 내에서 세대간 전달되어 내려온 독특한 문화적 내용과 정치 규범이다(William 1993). 이와 같은 국가정체성은 자국민과 타국민을 구별하는 감정으로 강한 사회적·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며, 집단의 구성원은 국가정체성에 위협이 되는 타자의 존재를 확인하

고, 자기정체성을 공고히 함으로써 결속력을 다지게 된다(하영선 외 2005, 445). 국가정체성은 고정적·단일적인 개념이 아니며, 변화하는 세계에서 실제의 역사적 시간과 공간에서 형성되고(Suny 1999), 다면적·다층적·유동적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정체성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되고, 행위자가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내재화하는가에 따라 변화한다.

전후(戰後) 일본의 국가정체성 형성 및 변모는 패전의 경험과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풍요로운 삶의 향유, 장기불황의 늪, 그리고 중국의 부상에 따른 위협인지 등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패전 이후, 폐허로 변한 땅에서 형성된 서구에 대한 열등감과 부정적 정체성은 전후 일본이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었고, 이는 1960~8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해 긍정적 정체성으로 변모하게 된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일본 국가정체성의 독특성과 차별성, 우월성을 강조하였고, 이는 현재까지 많은 일본인들의 사고 기저에 깔려있다(김중태 2012; 김필동 2007). 비록 1990년대 거품경제가 붕괴하며, 저성장과 장기간의 경제불황을 겪었으나, 여전히 일본은 아시아 최대의 경제국이었다. 일본의 인구는 아시아 전체 인구의 10%에 불과하였으나, 지역전체 GNP의 2/3를 점하였으며, 경제규모는 당시 아시아 두 번째 경제대국인 중국의 10배, 한국의 15배, 대만의 20배, 인도네시아의 30배, 그리고 싱가포르의 100배에 달하는 등(Pempel 1999) 비교불가의 우위를 점하였다. 이러한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를 기반으로 일본은 아시아 지역의 차별적인 국가로서 국가정체성을 형성해 왔다. 이에 더하여 일본의 경제력이 강력한 국제적 영향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경제적 측면에서 초강대국인 미국과 견줄 수 있는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미일간의 역학관계도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를 넘어 치열한 경쟁관계로 변화하였다(윤덕민 2013).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의 지역에 대한 인식은 아시아라는 지리적 근접성을 넘어 경제적·안보적 영향력이 미치는 서구공간까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일본 지역구상의 변천

(1) 2000년대 이전 일본의 지역구상

전후(戰後) 일본의 지역구상은 미일동맹에 기초하며, 현재까지도 일본 국가전략 전반에 내재하고 있다. 요시다 독트린⁴⁾으로 대변되는 외교 전략을 토대로 전후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안보 협력을 기반으로 자국의 경제발전에 전력을 기울여 왔고,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와 상호의존의 국제질서에서 제2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일본에게 제1의 동맹국은 미국이고, 대체불가의 존재로 자리하게 되었다.

한편,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일본은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당시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은 주로 무역, 금융, 투자, 기술공여 및 개발원조(ODA)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1990년 일본기업의 전체투자에서 그 비중이 60%에 달할 정도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의 대아시아 투자 및 역내 국가들간 경제교류의 활성화는 아시아 국가들의 상호의존관계를 증진시켰으며, 미국과 일본의 쌍무관계 중심에서 역내 국가들간의 상호관계 중심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아시아 지역주의를 향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김기석 2005, 76).

한편, 실질적으로 일본이 경제 분야의 아시아 지역구상 토대를 마련하고 역할을 수행한 것은 1988년 10월 통산성(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TI)의 제안에 의한 1989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s Cooperation: APEC) 형성에서였다(Kuniko Ashizawa 2013, 經濟産業省⁵⁾). 이후, 일본은 1991년 아세안확대외교

4) 연합군 총사령부 점령 아래 요시다 시게루 수상이 주장한 일본의 외교노선으로 냉전 상황에서 미국과의 제휴를 외교의 기조로 하며, 안보문제는 미국에 의존하는 한편 경제발전에 국가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5) 1987년 1월 타무라 당시 통산산업대신은 호주 방문 시,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산업담당대신이 경제상황, 산업구조조정, 기술개발, 중소기업 등에 관한 논

장관회의(ASEAN Post-Ministerial Conference, ASEAN - PMC)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대화를 위한 다자주의적 협의체 창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따른 ‘아시아통화기금(Asian Monetary Fund, AMF)’ 구상 제안, ‘ASEAN+3’ 창설 주도, 1988년 신(新)미야자와 선언을 통해 3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협력을 약속하며 ASEAN 10 개국과 한·중·일 3개국간 ‘치앙마이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CMI)’ 제시 등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전후 일본은 미국과의 쌍무적 관계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관심의 영역 및 지역인식을 확대시키고, 지역구상을 구체화시키며, 역내외 협력의 진전을 위한 자국의 적극적 역할을 증대시켜 온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일본의 적극적 역할은 일본이 미국과 견줄 수 있을 정도의 경제선진국으로서 자리매김한 이후의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이고, 주로 주변국에 대한 공여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또한, 일본이 추구한 협력의 지역적 범위는 한국 등 인접 국가들이 생각한 지리적 협력의 범위보다 더 넓은 ‘아시아-태평양’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2)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지역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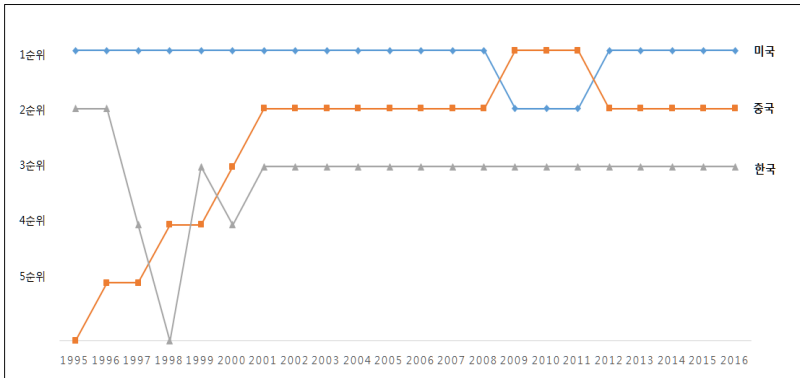
①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대중인식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부상은 역내 국가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위기로 다가왔다. 특히, 종래 아시아 지역에서 경제적 우위를 점하며 존재감을 과시해 왔던 일본에게 중국의 부상은 긴장이자, 위협요인이었다. 급속한 성장에 따라 제기된 중국부상론은 장기화된 일

의를 하는 『환태평양산업대신회합』을 제창하고, MITI 내에 "아시아태평양무역개발 연구회"의 설치를 통하여 1988년 APEC의 모체가 되는 구상이 나왔다. 經濟産業省. APEC 設立経緯. http://www.meti.go.jp/policy/trade_policy/apec/history/organize.html. (검색일: 2018.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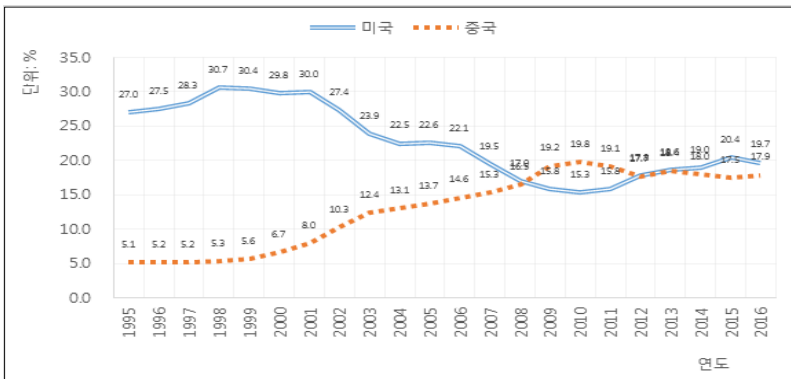
본의 경제불황과 맞물리면서 2010년 경제규모면에서 일본을 추월하며 중국은 명실공히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일본의 대중(對中) 무역수출비중 또한 증가하며 2000년대 이후 중국은 일본의 중요한 교역상대국이 되었다.

<그림 1> 일본의 대미/대중/대한 수출순위 변화(1995~2016)



자료: 일본재무성 무역통계 연도별 수출상대국 상위 10개국의 추이(1995-2016) 중 재구성

<그림 2> 일본의 대미(對美)·대중(對中) 수출비중 (1995-2016)



자료: 일본재무성 무역통계 연도별수출상대국 상위 10개국의 추이 (1995-2016) 중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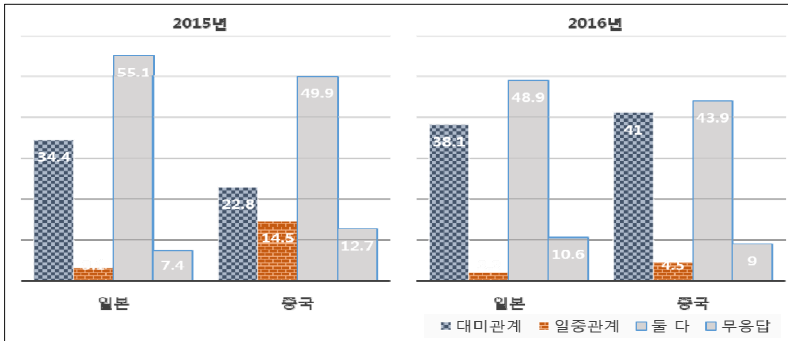
<그림 1>은 지난 20년간 일본의 대미(對美), 대중(對中), 대한(對韓) 수출순위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본에게 중국은 1995년에 이전에는 상위 5개국 순위권 밖이었으나(6위), 2009년 미국을 앞서 일본의 최대수출상대국이 되었고, 이후에도 줄곧 미국과 1,2위를 다투며 불과 20년 사이 일본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또한, 지난 20년간 일본의 대미(對美)·대중(對中) 수출량을 살펴보면, <그림2>과 같다. <그림2>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전체 수출량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미국과 5배가량 차이가 났으나,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그 격차가 점점 좁혀져 2009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일본의 제1의 교역상대국이 된다. 2012년도에 들어서는 순위를 다시 미국에게 내주게 되나, 이후의 교역량은 순위와 무관하게 그 격차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 1995년도에는 일본의 전체 수출량 중 5.1%에 불과했던 대중수출량이 2016년도에는 17.9%(2010년 19.8%)를 차지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거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일본의 대중무역의존도가 과거에 비해 매우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당시의 센카쿠열도 주변 어선출몰 등 중국과의 마찰은 일본에게 있어 위협으로 다가왔다(임재환 2016). 따라서 일본은 중국에 대한 안보·경제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2016년도 言論·NPO에서 시행한 일중여론조사에서는 일본의 대중(對中)·대미(對美) 인식에 대한 흥미로운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림3>은 일중관계와 대미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조사 결과 일본과 중국 양국 모두 ‘대미(對美)관계가 일중관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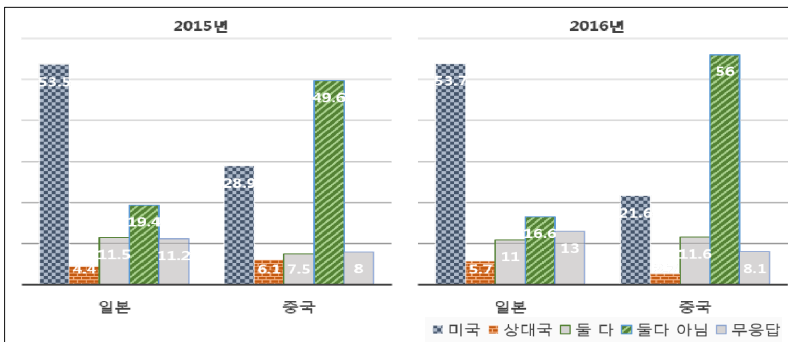
<그림 3> 일중관계와 대미관계의 중요성



자료: 言論-NPO. 2016. 第12回日中共同世論調査 (2016.9.23.). p.18. 재구성

이와 같은 결과는 동일한 보고서에서 일중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질문에 70~80% 이상의 양국 국민이 일중관계의 중요성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⁶⁾ 미국이라는 변수가 개입할 경우, 상대국과의 관계보다 미국과의 관계가 더 중요시 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림 4> 일중 상대국과 미국에 대한 친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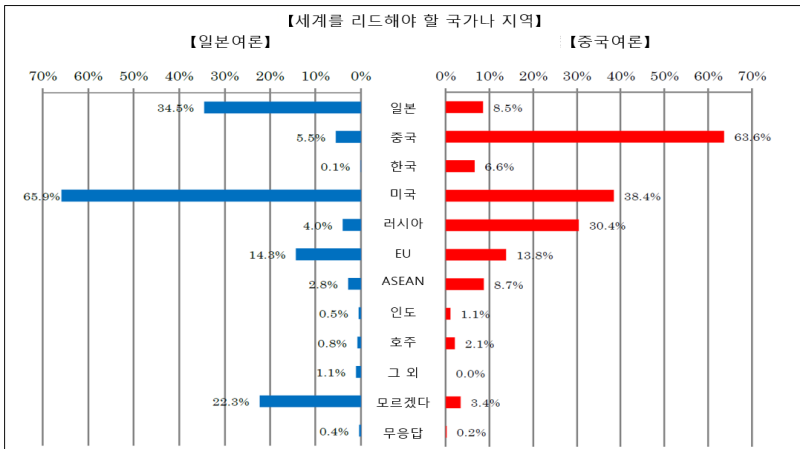


자료: 言論-NPO. 2016. 第12回日中共同世論調査 (2016.9.23.). p.18. 재구성

6) 2005년부터 2016년도까지 일본과 중국 양국 국민에게 일중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양국관계가 중요하다고 응답한 인원은 전체의 평균 70~80%(일본-가장 낮은 시기: 2014년 70.6%, 가장 높은 시기: 82.1%), 중국-가장 낮은 시기: 2014년 65%, 가장 높은 시기: 2010년 92.5%)에 달하였다.

또한, 상대국과 미국에 대한 친근감 조사도 양국 모두 ‘상대국보다 미국에 대한 친근감을 더 강하게 느낀다’고 대답한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그림 4>), 일본이 중국보다 미국에 대한 친근감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또한 일본보다 미국에 대한 친근감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는 나타났으나, 이 비중이 ‘양쪽 모두에게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보다 낮게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즉, 중국은 미국에 대한 친근감은 일본보다는 적게 느끼지만, 미중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중국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대미관계와 비교하였을 때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친근감 또한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대미(對美)·대중(對中) 인식은 일본의 지역구상 및 정책에도 반영된다.

<그림 5> 일중공동여론조사: 세계를 주도(리드)할 국가 혹은 지역



출처: (원문) 言論·NPO. 2016. 第12回日中共同世論調査 (2016.9.23.). p.39.

<그림 5>은 세계를 주도(리드)할 국가 혹은 지역에 대해 일본과 중국 국민에게 질문한 것이다. 중국의 경우, 자국이 세계를 주도할 국가

라고 답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에, 일본의 경우, 세계를 주도할 국가로서 미국을 자국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를 주도할 국가란, 타국에 대한 우월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의 경우, 자국이 일본외 역내외 국가들보다 우위에 있으나, 스스로를 미국보다는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조사의 결과는 일본이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편승하고, 미국의 지역구상에 적극 동조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즉, 일본의 인식 저변에 미국이 자국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다음으로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국가가 일본 스스로라고 답한 점을 볼 때, 미국이 없는 지역질서에서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자임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② 일본의 지역구상

캠벨(Cambell, 1992)에 의하면, 국제관계에서 나타나는 위협은 모두 동등하게 위협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위협만이 위협으로 인식된다. 이 과정에서 자기정체성과 타자에 대한 정체성 인식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기존의 인식이 바뀌기도 한다. 결국 국가정체성은 위협으로 인지되는 타자의 위협에 의해 확고하게 설정되고(하영선 외 2005, 445), 국가의 대외정책은 타자와 구별되는 국가정체성을 반영한다.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중국의 성장은 일본에게 위협으로 인식되었으며, 그 결과 일본의 많은 정책들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고, 역내외 국가들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 및 확장시키기 위한 목적과 연관되어 나타났다.

2002년 1월 고이즈미 수상은 ‘함께 걷고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으며, 2013년 12월 일본-ASEAN 특별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을 지향하는 ‘도쿄선언’과 공동행동계획을 발

표하였다.⁸⁾ 그리고 2005년 기존 ASEAN+3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포함하는 ‘ASEAN+6’에 입각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개최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일본이 해당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영향력 강화를 억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윤덕민 2013, 78-80). 아소 수상이 제시한 일본, 호주, 인도, 미국을 잇는 ‘자유와 번영의 호(弧)’ 또한 이러한 일본의 대중견제정책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한편, 2009년 일본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는 일본사회 및 국제사회의 변화를 야기하였다. 하토야마 총리가 이끄는 민주당 정권은 ‘긴밀하고 대등한 미일관계’와 열린 지역협력 원칙에 입각한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을 발표하였다.⁹⁾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이 제기된 배경에 대해서는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한 동아시아공동체 필요성 인식,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 하토야마 수상의 개인적 신념 등이 제시된다(이면우 2011, 372-373). 이 가운데 중국에 대한 대응의 측면을 살펴보면, 기존의 구상이 중국을 경계의 대상으로 두고 ASEAN을 협력의 우선순위에 두었다면, 민주당의 구상은 중국을 포함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점이 있다. 즉, 중국과 양자협약보다는 중국을 포함한 다자협약의 틀 속에서 중국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7) 고이즈미 총리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은 아세안과 한·중·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의 경제·안보 연대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인 협력항목에는 유학생 적극 수용, 빈곤퇴치를 위한 경제지원, 테러 및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 마약 밀수 등 단속, 아세안 주변 해역에서 반발하는 해적에 대한 공동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8) “東アジア共同体構築に係る我が国の考え方”, http://www.mofa.go.jp/mofaj/area/eas/pdfs/eas_02.pdf (검색일: 2018년 2월 1일)

9) 다만, 하토야마의 ‘동아시아공동체구상’은 필요성 및 중요성만 제시되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鳩山由紀夫, 2009) 매우 제한적이지만, 2009년 11월 싱가포르 연설을 통해 대략의 방향을 유추할 수 있다. 하토야마 수상은 동아시아 지역의 기능적 공동체 망을 중첩적으로 만들 것을 주장하며 ①번영을 위한 협력, ②녹색 아시아를 위한 협력, ③생명을 위한 협력, ④우애의 바다를 위한 협력, ⑤인적교류를 추진방향으로 제시하였다(首相官邸 2009).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정권은 중국위협론의 현실화를 직시하며 미일동맹과 대중견제전략을 표면화하였다. 가시화된 센카쿠 영유권 문제는 일본과 중국 사이의 긴장을 어느 때보다 고조시켰고, 이는 아베정권이 당면한 주요한 대외정책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 이와 같은 국제정치적 상황 속에서 치러진 중의원 총선거 과정에서 자민당은 국가안보기본법 제정,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헌법개정 등 안보체제 강화, 영토·영해 주권에 대한 강력한 대응, 고노담화 및 무라야마 담화 재검토, 근린제국조항 수정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결연한 대응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영유권에 관한 물리적 압박, 과거사를 둘러싼 한중 양국의 대일(對日)연대, 안전보장 태세 정비, 중국의 해양에서의 자기주장 강화에 대해 중국을 ‘지금 여기 존재하는 위기’¹⁰⁾로 상정하고, 강경한 ‘대중(對中)억지전략’을 선택하였다(서승원 2017, 290~2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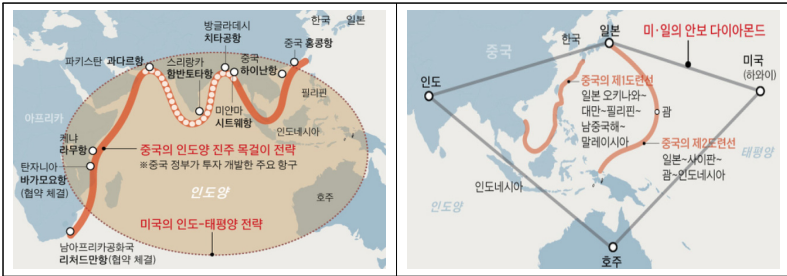
이처럼 아베 정권의 지역구상의 기저에는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과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위시한 정책적·전략적 고려가 반영되어 있다. 아베정권이 정책기조를 구체화하며 2013년 12월에 발표한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대해서』에서 적극적 평화주의, 자유·민주주의·기본적 인권·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의 수호, 해양국가의 정체성, 중국 등에 의한 세력균형(power balance)의 변화, 센카쿠 인근의 영해·영공 침범 등을 언급한 것(国家安全保障會議, 2013)은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아베정권은 미(美) 오바마 정권 시기 제시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적극 동조하였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세력의 출현을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부

10) 아베 수상은 2013년 3월 17일 방위대학 졸업식 훈사에서 일본에 대한 영토·영해·영공에 대한 도발을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위기’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중국에 의한 도발을 의미한다.

상하는 중국에 대한 안보아키텍처와 TPP 경제협력 2가지 축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서승원 2017, 303). 이처럼 일본은 미국의 대아시아 전략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관련국들과 안보·경제협력을 강화하였다. 1차 아베 내각에서 제시된 ‘민주주의 안전보장 다이아몬드(안보다이아몬드)’ 구상과 ‘TPP’ 참가가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그림6>에서처럼 ‘안보다이아몬드’ 구상은 일본, 호주, 인도, 하와이(미국) 4개국을 마름모꼴로 연결하여 인도양에서 서태평양에 이르는 해양의 질서를 유지하자는 내용으로,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과 대비되며, 중국을 견제하는 구상으로 평가되었다(안용현 2014; 김민석 2017). 비록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는 ‘아시아-태평양’이라는 개념보다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洋戦略)’¹¹⁾이라는 일본의 외교전략(外務省 2017)과 맥락을 같이 한다.

<그림 6> 미중 지역전략과 미일안보협력



출처: 중앙일보. (2017.12.22.)

11) 아베 수상은 2016년 8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에서 처음 제안한 것으로 태평양에서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자유와 법치,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장(場)으로 규정하고, 관련 국가들이 국제규범에 근거한 인프라 정비와 무역·투자, 해양안보 분야 등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TPP는 중국이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로 추진되며, 사실상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으로 여겨진다. 비록 트럼프 행정부의 TPP 탈퇴 선언 이후 이전보다 그 동력을 상실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중국의 세력확장을 견제하고자 하는 지역협력구상임에는 변함이 없다.

3. 요약 및 분석

일본의 국가정체성은 격변하는 국제정치적 상황 속에서 주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경험하며 변화되었다. 이를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960년대 이전 형성된 일본의 정체성은 전후(戰後) ‘패전국, 피해국’이라는 자기 인식에 기반하며 미국에 의해 형성된 전후 질서에 편입되어 미국과의 협력을 우선시한 대외전략을 수립하였다.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 ‘허브 앤 스포크 (hub-and-spoke)’ 시스템을 구축하며,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태국 등과 양자동맹관계를 형성하였는데, 이러한 관계는 후대에도 지속적으로 국가관계에 영향을 미쳤다(최은미 2010). 전후 폐허가 된 일본은 경제 및 안보 면에서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였고, 미국과의 긴밀한 양자관계를 우선시하였다(전진호 2005). 그리고 미국과의 안보협력 하에, 일본은 패전 후 피해를 빠르게 극복하며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미국의 보호 아래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급속한 경제성장을 한 일본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였고, 이에 따라 스스로를 ‘경제선진국’, ‘경제신흥국’으로 여겼다. 미국과의 관계 또한 기존의 보호국-피보호국의 관계를 넘어 상호간 경쟁할 수 있는 관계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확대된 주변국과의 관계는 주로 동남아시아와 이루어졌으며, 협력은 주로 원조(ODA)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는 일본의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증대된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의

미하는 것이다.¹²⁾

그러나 1990년대 장기불황에 빠지면서 일본의 자국에 대한 인식은 ‘잃어버린 10년(失われた10年)’이라는 자조(自嘲)적 표현으로 표상된다. 성장가도를 달리던 일본경제가 장기간 침체에 빠지고, 자민당 일당 지배의 종식과 정계개편의 유동성, 한신대지진, 옴진리교 사건 등 일본의 정치·경제·사회 나아가 가치체계와 윤리규범까지 뒤흔든 사건들이 발생하자 일본인들은 1990년대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당시의 일본 사회의 내부의 불안정성과 혼란을 반영하는 것이며 (김용복 2011; 최은미 2015),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아시아에서 절대적 위치를 점하고 있던 자국의 위상에 대한 위협감을 느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일본이 AMF, ASEAN+3, CMI 등 동남아 지역 등과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은 역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고,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일본의 경제는 장기불황 이전의 상황으로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하였으나, 불황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부터 점증하는 중국의 부상은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과의 관계 강화의 중요성과 더불어 경제·안보 위협감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대중(對中) 위협인식은 일본의 지역구상 및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리고 단극적 질서의 중심에 서있던 미국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다는 논의와 더불어 중국의 부상과 그 성격에 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동아시아에서 세력전환(power shift)이 일어나고 있다는 담론이 급속히 퍼져갔다(박철희

12) 1969년 미국의 대아시아 원조가 각 국에서 차지한 비율은 베트남 96%, 한국 64%, 태국 52%, 인도네시아 48%, 필리핀 32%, 말레이시아 15%, 대만 15%였으며, 같은 시기 일본의 대아시아 원조는 필리핀 65%, 대만 65%, 말레이시아 37%, 한국 31%, 인도네시아 21%를 차지하였다(Crone 1993, 508).

2017). 이와 같은 국제정치적 흐름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현상변경을 시도하려는 중국과 이를 견제·억지하려는 일본의 의도가 경제·안보 정책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다음 <표1>는 일본의 국가정체성과 지역구상의 변화를 시기적 흐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표 1> 일본의 국가정체성과 지역구상의 변화

	1960년대 이전	1960년대-1980년대	1990년대-2000년대	2000년대-2010년대	2010년대-현재
경제	전후	경제성장기	장기불황기	장기불황이후	
자국인식	패전국 피해국	경제선진국 경제신흥국	잃어버린 10년	보통국가 / 자유주의 수호자	
대중인식	-	-	경제위협 ▶ 경제·안보 위협		
대외전략 변화	미일동맹				미국경사의 인도-태평양 전략
대중정책	-	-	대중 견제 - 중국포위·고립전략 (민주당: 중국을 포함한 다자주의틀 속 대중위협 감소)		
협력지역	미국	미국·동남아 ▶ 미국·동남아·한중일 ▶ 미국·동남아·태평양지역 확대			
협력분야	-	경제분야 ▶ 경제·안보분야 범위 확장			
주요 지역구상	-	-	AMF, ASEAN+3, CMI	EAS, ASEAN+6, 동아시아 공동체구상	안보 다이아몬드, TPP 등

출처: 필자작성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국가정체성은 전후부터 60년대 이전까지 ‘패전국/피해국’에서, 1960년대부터 1980년대의 경제성장기에 ‘경제선진국/경제신흥국’으로, 1990년대에서 2000년대 경제불황기에 ‘잃어버린 10년’으로, 그 이후, ‘보통국가·자유주의 수호자’로 스스로

를 규정하며 변모해 왔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일본의 지역인식은 미국과의 관계 중심에서 한중일, 아세안 등 주변부까지 외연을 확장 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점증하는 대중위협인식은 경제 분야에서 경제 및 안보 분야까지 확장되었고, 일본의 대외전략 또한 경제 중심에서 안보영역까지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협력 노력은 일본의 AMF, ASEAN+3, CMI 형성을 위한 적극성, 동아시아공동체구상, 안보다이아몬드 전략, TPP 참여 등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국제정치의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일본의 자기인식과 국가정체성은 전쟁 후 패전국·피해국에서 경제성장을 통한 우월성에 기반한 주변국을 이끌어 갈 주도국, 그리고 중국에 위협에 대응하며 보편적 가치 추구하고 자유주의 수호의 앞장서는 국가로 스스로 발전되고, 변모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에 기반한 지역인식은 미국 중심에서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한 아시아-태평양주의, 그리고 인도-태평양까지의 범위 확대되었고, 주변국과의 관계 또한 일미 관계를 중요시하되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주요 협력 분야 또한 경제분야에서 안보영역까지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자국인식과 국가정체성, 지역구상이 TPP 참가와 TPP 11 추진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다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Ⅲ. TPP를 통해 본 일본정치경제 - 경제의 안보화, 안보의 경제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공산품 및 농업 제품을 포함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노동규제, 금융, 의료 서비스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자유화하는 협정으로 2006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P4) 체제로 출범하였다. TPP는 출범 초기에는 국제적인 영향력이 크지 않았으나, 2008년 미국이 가입하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미국의 참여 이후 2008년 11월 호주, 페루, 베트남, 2010년 10월 말레이시아, 2012년 10월 캐나다, 멕시코가 가입선언을 하였다. 일본은 2013년 이 협정에 가입하였고, 이후 TPP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으로 격상되었다(이상현 외 2015). TPP는 2010년 3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친 각료 회의를 거쳤고, 2015년 10월 5일 최종타결되었다.¹³⁾

일본에서 TPP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2010년 10월 1일 간 나오토 총리가 국회 소신표명연설에서 동아시아 지역외교에 대해 언급하며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교섭 참가 등의 검토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권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면서부터이다(首相官邸 2010). 이후, 11월 9일 각료회의에서 ‘포괄적 EPA에 관한 기본방침’¹⁴⁾ 발표를 통해 일본 통상정책의 기초변화를 공식화하고, 논의를 진척시켰다. 이어서 2011년 11월, 노다 수상이 APEC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협

13) TPP는 19차에 이르는 공식회의와 수차례의 각료회의 및 비공식 회의를 거쳐서 타결되었는데, 그 주요 협정내용으로는 상품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포함하여 상품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외에도 원산지규정, 무역규제, 동식물검역(SPS), 기술장벽(TBT), 투자, 국경 간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국영기업,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협력 및 역량강화, 경쟁정책, 개발, 중소기업, 규제통합, 투명성, 행정 및 제도 조항, 분쟁해결, 예외 등 총 30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상현·정대희·안수정 2015).

14) ①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 높은 수준의 FTA 추구, ②TPP 참가요건 조성, ③농업·규제 개혁 등의 선행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음(內閣官房 2010). 이는 2009년 12월 결정된 민주당 정권의 ‘신(新)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기존 경제정책과 차별화된 전략이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기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활용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고도성장 벨트에 참여하여 성장을 도모하며, 대내적으로는 기존 시스템에서 보호받고 있던 농업, 금융 등의 저경쟁력 산업을 재편할 수 있는 전략이기도 하였다(최희식 2011).

의 의향을 대외적으로 표명하였고, 2013년 3월 15일 아베 수상이 정식 참여를 선언하였다. TPP는 P4의 확대판이며, 최종적으로는 APEC 회원국 대상의 환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를 지향하고 있다.

2016년 12월 출범한 미(美) 트럼프 행정부가 TPP 탈퇴를 선언(2017.1.20: 탈퇴 선언, 1.30: 공식 표명)함에 따라 존폐위기를 겪었으나, 일본이 지속 추진할 의사를 표명하였으며(2017.11.11.), 2018년 2월 현재는 일본 주도로 ‘미국 빠진 11개국(TPP 11)’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이하 CPTPP)의 형태로 추진¹⁵⁾되고 있다 (김양희 2010; Drake-Brockman, Jane 외 2011; Gregory, Julia 2018; New Zealand Foreign Affairs & Trade 2006; Office of the United State Trade Representative 2017).

〈표 2〉 일본의 TPP 논의 전개과정

정당	내각 (시기)	일시	주요사항
민주당	간 내각 (2010.6.8. -2011.9.2.)	2010.10.1.	간나오토 총리 국회소신표명 연설, TPP 참가 검토 최초 발표
		2010.11.9.	포괄적 EPA 기본방침/ 통상정책 기초변화 시도 및 공식화 : 높은 수준의 FTA 추구, TPP 참가여건 조성, 농업·규제개혁 선형
	노다 내각 (2011.9.2. -2012.12.26.)	2011.11.	노다수상, 하와이 APEC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협의시작 의향 최초 표명 “TPP 교섭참가를 위해 관계국과 협의에 들어가겠다.”
자민당	2차 아베 내각	2012.11	아베수상, 중의원 선거에서 TPP 교섭참

15) 일본을 중심으로 베트남, 브루나이,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페루, 칠레 등 1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국들은 2018년내 서명, 2018년내 발효할 것에 합의하였다(김길수 2017).

정당	내각 (시기)	일시	주요사항
	(2012.12.26. -2014.12.24.)		가 반대 공약 제시
		2013.3.15	아베수상, 미일정상회담 시, 일본 교섭참가 공식선언
	3차 아베 내각 (2014.12.24. -2017.11.1.)	2016.3	TPP 의결 및 국회 동의 신청
		2016.11.10	TPP 법안 중의원 통과
		2017.4	아베수상, TPP 지속추진 의사 표명
	4차 아베 내각 (2017.11.1. -현재)	2017.11.11	TPP 11 참여국간 일본 주도의 CPTPP 추진(2018년내 서명, 2019년 발효 합의)

출처: 필자작성

1. 일본의 TPP ‘참여’의 정치경제

일본이 TPP 참여를 정식으로 선언한 것은 자민당 정부에서지만, 논의를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민주당 정부에서였다. 보다 정확히는 간 내각에서 논의를 본격화하였으며,¹⁶⁾ 2011년 11월 미일정상회담에서 노다 총리가 TPP 교섭 참가 발표, 2013년 3월 15일 자민당 아베총리가 일본의 TPP 참여를 공식선언하였다.¹⁷⁾

16) 2009년 집권한 민주당 하토야마 내각(2009.9.16.-2010.6.8.)에서는 TPP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로 ‘ASEAN+6’의 동아시아공동체 건설을 핵심 대외전략으로 제시하며, 동북아 주변국과의 FTA에 관심을 표명하였다(김영근 2013; 김양희 2010).

17) 사실 아베총리는 2012년 11월 중의원 선거에서 ‘성역 없는 관세철폐를 전제로 하는 한 TPP 교섭참가에 반대’한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는 농업표 이탈을 우려한 자민당내 반대가 거세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자민당 내 ‘TPP 참가 즉시 철회를 요구하는 회’등을 중심으로 약 240명의 TPP 참가교섭을 반대하는 자민당 의원들이 ‘참의원 선거전에 당이 양분되는 상황을 국민에게 보이면 안 된다’며 TPP 교섭참가를 반대하였다. 그러나 아베총리는 무역활성화, 미·일 동맹 강화, 성장전략 추진을 위해 TPP 교섭참가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총리 취임 이후 TPP를 본격 추진하였다. 그러나 TPP 참여가 공식선언된 이후에도 ‘TPP 대책위원회’등을 설치하여 향후의 교섭을 감시하며, 일본 측의 핵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TPP

한편, 간 내각의 TPP 참가 검토 발표는 일본 내부의 첨예한 의견대립을 불러일으켰다. TPP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였다.¹⁸⁾ TPP가 높은 수준의 자유화, 새로운 비즈니스 형성 등을 목표로 하고 있어 자동차·전자 등 수출산업 관계자들은 가맹국의 관세율 삭감으로 인한 일본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할 것이 예상되어 환영하였으나, 값싼 수입품의 유입을 우려하는 농수산업, 국내 농업단체, 민주당 내부 등 관련 이해단체의 극심한 반발을 일으켰다. 또한, TPP가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투자와 제도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익과 손실이 예상되는 측이 크게 대립하였다. 또한, 서비스·무역·투자 부분에서는 기업이 국제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반면, 국내법·제도를 변경하거나, 대일 투자가가 일본정부를 제소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예상되었다.

먼저 TPP 참여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첫째, TPP 참여가 일본의 수출 증가 및 성장과 고용 확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⁹⁾ 둘째, 기존 시스템에서 보호받고 있던 농업 및 금융산업을 재편하고, 뒤처지고 있는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며, 셋째, 미국의 아태전략과 보조를 맞추며 미일동맹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넷째, 무역 투자 규칙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향후 일본의 이익이 된다고 보았다(김용복 2013, 117-118). 즉, 일본 정부는 일본의 TPP 참여가 경제적 효과

교섭으로부터 탈퇴도 불가피하다는 입장 또한 존재하였다.

18) TPP 참여에 대한 일본내부의 논의에 대해서는 김호섭(2012), 김영근(2013), 박창진·김용민(2012) 참조.

19) 2013년도 일본정부에서 발표한 ‘일본의 TPP가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시산’을 살펴보면, 수출 증가 등에 의한 3.2조엔의 GDP증대효과(0.66%) 발생하고, 저가 농산품 수입으로 농림수산업 생산이 3조엔 정도 감소하게 될 것이나, 다른 산업의 생산 증가 및 소비 확대가 이를 보전, 구체적인 경제효과는 소비에 의한 영향이 3조엔(0.61%), 투자가 0.5조엔(0.09%), 수출이 2.6조엔(0.55%)의 GDP 증대효과, 수입 증가로 인한 GDP감소 효과는 2.9조(0.6%)로 파악되었다.

및 외교전략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다(内閣官房 2012). 이외에도,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권(FTAAP) 구상의 첫단계, TPP 협정 참가국간의 상호 관세철폐로 인한 무역증가, 일본 제품과 TPP 협정 참가국의 국내제품과 비차별, 일본의 기술과 브랜드 유지, 해당지역내 일본기업의 부당취급 방지, 무역 수속 혹은 사업가들의 출입국 수속 간편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해외활동 원활화 등이 주요 이점으로 제시되었다.

반면, TPP 참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일본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개방과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은 잘못된 주장이며, 농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및 금융부분 또한 피해를 입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경제부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전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해야 하므로 농업쇠퇴, 자급률 저하, 안전하지 않은 식품 증가 및 식품의 안전기준 완화, 공적 의료보험 혜택 축소, 질 낮은 외국인 전문가 및 단순노동자의 대량유입, 지방 공공사업의 개방에 따른 일자리 박탈 가능성, 외국인 투자자의 소송으로 국내 제도 변경 등으로 인한 국가주권 영향 등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TPP 참가를 위한 논의는 지속되었고, 아베총리에 의해 참가선언되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적 요인으로는 첫째, 통상정책의 새로운 기조변화를 시도하기 위함이다. 앞서 알아보았듯, TPP는 P4의 확대판이자, 궁극적으로는 APEC 회원국 대상의 환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TPP 참가는 ‘국가개방’ 혹은 ‘제2의 개국’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김양희 2010, 3). 또한, 세계금융위기와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경제의 돌파구와 새로운 성장전략이란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김용복

2013, 133).

둘째, 농업분야 등 국내저성장 분야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함이다.²⁰⁾ 농업분야는 역사적으로 일본보수주의의 기원이자, 이익유도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며 성역으로 보호되어 왔다. 그러나 낮은 생산성과 경쟁력 부족 등 개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를 위해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부문 개혁, 생산성을 높여 성장분야로 전환하기 위한 금융과 통신, 의료 등 서비스 분야 개혁, 규제개혁 추진을 통한 비효율적인 제도와 관습의 변화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국내개혁은 고통을 동반하지만, 일본이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이상 피할수 없는 일시적인 고통이자, 시장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을 하지 않으면 일본경제는 점점 축소될 것이라는 것이다(김호섭 2012, 250). 즉, TPP 교섭 참가를 명분으로 국내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 것²¹⁾으로 볼 수 있다.

대외적 요인으로는 첫째,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및 동맹 강화를 위함이다. 당시 일본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로 악화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내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 및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박창건·김용민 2012).²²⁾ 미국은 TPP를 아시아 진출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미국은 TPP를 단순한 제품의 무역 개념을 넘어서 높은 수준의 통상질서를 환태평양지역에 구축하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시아의 성장을 자국의 번영으로 연계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20) 2011년 11월 9일 내각부에서 발표한 『포괄적 EPA 기본방침』에서는 FTA 추진을 위해 농업분야의 경쟁력 향상과 해외수요 확대 등 개혁이 불가피함을 지적하고 있다(內閣官房 2010).

21) 간 수상은 TPP 참여 표명과 동시에 규제개혁 등 국내 경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뜻을 밝히고, 농업개혁을 위한 ‘농업구조개혁추진본부’를 설치한 것은 이러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최희식 2011, 2).

22) 박창건·김용민(2012)은 일본의 TPP 참가는 ‘어쩔 수 없는 찬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2010년 APEC 정상회의 의장국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하고, 중국을 견제하며, 국내 산업구조 개혁을 가속화시키려는 의도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같은 전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미국은 단순히 물건의 수출입에 대한 관세 철폐뿐만이 아니라, 투자, 정부조달, 기준·인정,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등의 자유화를 위해 규정을 마련하는 ‘21세기형 자유화’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미일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보험 분야 등 서비스 산업에 관심을 표명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중국이 관세 자유화의 예외 인정 등으로 아시아 지역에 세력을 확대하는 국가자본주의를 견제하려는 것이 미국 TPP 전략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였다. 이러한 목적 하에 미국은 일본의 TPP 참여를 적극 독려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일본 또한 미일정상회담²³⁾을 통해 TPP 교섭참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였다.

둘째, 대중국 견제 정책의 일환이다. 주지하듯이, TPP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이자 대중국 견제 전략이고, 일본이 동조한 형태이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은 일본에게 위기이자 위협으로 인식되었으며, 이러한 양상은 경제분야에서 안보분야까지 확대되었다.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편승하게 된 것이다. TPP 참여를 공식선언한 아베 총리는 일본외교정책의 기축을 ‘미일동맹의 강화’와 ‘강한 일본’으로 요약하였는데(外務省 2013), 이는 방위력의 강화²⁴⁾와 경제의 재생을 추구하는 동시에 광범

23) 일본의 TPP 참여결정에는 미일정상회담이 기폭제가 된 것으로 여겨진다. 미일정상회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TPP에 대한 미·일 공동성명 개요> ①양 정부는 일본이 TPP 교섭에 참가하는 경우, 모든 품목이 교섭의 대상이 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정을 달성하는 것에 합의, ②일정의 농산품(일본), 일정의 공업제품(미국)과 같이 양국 간 무역상 민감 품목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양국 정부는 최종적인 결과를 교섭으로 정함, ③TPP 교섭참가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모든 관세철폐를 미리 약속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 ④양 정부는 TPP 교섭참가를 향한 협의를 계속하며, 자동차 부문이나 보험부문에서의 현안사항, 기타 비관세조치에 대처함, ⑤TPP가 고수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향후 해야 할 작업이 남아 있음.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일본은 TPP 참가의 주요한 논쟁점 중 하나인 ‘성역 없는 관세철폐’의 장벽이 허물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경제적 요인에 대해서는 (조정란 2017) 참조.

위한 분야에서의 미일협력의 강화를 의미한다. 일본의 TPP 참여 결정은 이러한 정책기조 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김용복 2013), 결국 일본 정부는 TPP를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Kim 2013, 7).

이상을 통해 볼 때, 일본의 TPP 참여 결정은 국내적 이유와 대외적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으며, 그 기저에는 일본의 미국과의 관계 강화, 중국견제, 자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지역구상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일본 TPP ‘추진’의 정치경제: ‘미국 빠진 TPP (TPP 11)’추진의 의미

미국이 탈퇴하기 전까지 TPP는 아시아 태평양을 아우르는 대규모 경제협정이라는 경제전략²⁴⁾과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의 안보전략으로 이해되었다. 2000년대 들어 급속하게 성장하는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부상, 일본의 지위 하락,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등 새로운 국제환경 아래서 아시아-태평양 경제질서를 만드는데 주도적인 참여를 의미하는 TPP는 일본에게 매우 중요한 선택으로 여겨졌다(Kim 2013, 4).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1월 TPP 탈퇴를 표명함에 따라 미국과 일본이 주도했던 TPP 협정은 붕괴되는 위기를 맞았으며, 일본은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사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에 이미 2016년 11월 10일, TPP 법안이 중의원에서 통과되었고, 같은 해 12월 9일 참의원에서 가결되었다. 이에 일본은 미국 의회에서 비준되면 곧이어 TPP를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주요 추진국인 미국이 탈퇴하

24)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임재환(2016) 참조.

25) 총 12개국(미국 포함)이 참여할 경우, 전 세계 GDP의 약 40%, 세계 교역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세계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이상현 외 2015, 3).

면서 이와 같은 일련의 노력들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국내외 우려와 회의적 시선과 달리, 아베 정권은 TPP를 지속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주도적인 역할 하에 미국을 제외한 11개 국가들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추진할 것을 합의하였다.

미국의 탈퇴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지속적·적극적”으로 TPP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에게 TPP는 어떤 의미인가? 일본이 TPP를 지속 추진 결정에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탈퇴가 일본의 경제적·전략적 손실이 예상보다 크지 않으며,²⁶⁾ TPP 추진이 미일간 양자동맹 관계에 불협화음의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미국 빠진 TPP가 일본에게 있어 여전히 정치적·안보적·경제적 전략이익을 가져오고, 역내외 자국의 영향력 축소를 막고, 경제·안보 분야 등의 분야에서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최은미 2017).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TPP는 향후 미국이 입장을 선화하여 다시 참여할 경우 세계경제의 약 40%를 차지하는 자유무역경제권을 만들 수 있다. 일본 국내에서도 상당수준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²⁷⁾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성장전략이다. 특히, 향후 인구 감소로 내수시장이 축소되는 일본에게 있어 많은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한 경제연계 강화를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인 것이다. 미국의 탈퇴로 인해 규모는 줄어들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TPP 11’은 여전히 경제적 이

26) 미국의 탈퇴 결정으로 TPP의 경제효과는 연간 4,920억 달러에서 1,470억달러로 크게 줄어들지만, 과거 TPP 참가의사를 밝혔던 한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5개국을 포함하면 4,860억 달러의 경제효과가 발생하여 이전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다(Petri and Plummer 2017; Petri et al. 2017).

27) 일본 정부는 서비스와 투자 활성화를 포함하여 TPP 11의 경제효과로 8조엔 이상의 GDP 상승, 46만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익이 크다(김나은 2017; 김영채 2017).²⁸⁾ 더욱이 TPP의 최종적인 목표는 FTAAP이고, FTAAP 구축작업의 기초가 되는 TPP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호섭 2012). 즉, TPP가 실질적으로 ‘미일FTA’라고 여겨질만큼 미국이 핵심요인이긴 하였으나,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다. 여기에 다시 미국이 다시 TPP로 돌아온다면²⁹⁾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³⁰⁾

한편, 정치·안보적 측면에서 일본에게 TPP 참가는 미일동맹의 강화를 상징하며,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적극 동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드는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 빠진 TPP를 지속 추진하는 데에도 여전히 일본에게 정치·안보적으로 유의미하다.

첫째, 대중국 견제 및 대응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중국이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아세안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TPP 추진을 통해 이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재민 2017; Petroff 2018). 즉, CPTPP는 역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라 볼 수 있다.

둘째,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속에서 일본이 법과 질서에 기반

28) TPP가 일본의 GDP를 상승시키는 효과는 미국 포함 12개국인 경우 1.37%, 미국을 제외한 'TPP 11'일 때 1.11%로 집계되었다(川崎研一 2017). 이는 미국이 협정에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참여국간 합의한 규칙이 유지가 된다면 그 손실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아시아 시장에서 외자유제 완화와 국유기업 우대 등 일본 기업이 진출하기에 알맞은 환경이 TPP를 통해 정비되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이다.

29)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월 25일 세계경제포럼이 열린 다보스에서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더 나은 협상을 할 수 있다면 나는 TPP를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Pramuk 2018).

30) 일본은 CPTPP를 출범시킴으로써 21세기 무역규칙을 수립하는데 주도권을 행사하는 한편, 일련의 교섭과정에서 20여개 항목의 ‘동결조항’을 남겨둠으로써 향후 미국의 재참여 가능성을 열어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이승주 2017; 이종인 2017).

한 자유주의의 선봉에 서서 자유무역의 수호자임을 자처하며(헤럴드 경제 2017.3.29.), 주도적으로 협정을 이끌어 참여국들 간 선구자적·지도자적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다. 일본이 주도하는 CPTPP 협상에서 일본의 경제적 입지가 확대될 것이고, 일본 주도로 최종합의에 이르게 될 경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이종인 2017). 한편, 여기에는 일본의 ‘열린 지역주의’ 원칙³¹⁾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개방성, 투명성, 포괄성의 원칙하에 폭넓은 파트너의 참여와 그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중요시 여겨왔으며, CPTPP 또한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미국 없이도 TPP를 통한 실질적·잠재적 국익이 극대화 된다면, 이는 아베 수상의 외교리더십의 대표적인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대형 자유무역협정이다. 비록 경제대국 미국이 제외되었지만, 세계 GDP의 12.9%, 세계 교역량의 14.9%, 세계 인구의 6.9%를 차지하는 거대 글로벌 경제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을 제외하고도 경제안보적 이익을 높이고, 미국과의 관계 또한 유지할 수 있다면 장기집권의 포석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한 성과로서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사례를 통해 일본의 경제안보전략을 일본의 국가정체성과 지역구상의 관점에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

31) 열린 지역주의 원칙은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주의 전략을 언급할 때마다 주창한 핵심 이념이자, 기본원칙으로 ASEAN,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포함한 대영역을 의미한다(이원택 2011).

제정치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일본이 지역 내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변화시켜왔으며, 지역인식 및 지역구상이 어떻게 달라져왔는지를 통해 TPP 참가결정과 지속추진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국내외 경제·안보의 전략적 이익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국가정체성은 패전 후, 패전국·피해국이라는 인식에서 압도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한 역내 주변국에 대한 우월의식, 장기간의 경제불황 및 중국의 부상에 따른 위협인지로 인한 역내외 자국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노력, 경제회복기 자유무역주의 수호자로 변모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국중심의 사고에서 아시아-태평양,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인식의 폭을 넓히고, 미국과의 관계설정을 중시하면서도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해 온 것 또한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인식과 지역구상이 일본의 TPP 참여 및 추진의 정치경제학적 의미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PP 참여와 추진을 공식선언한 아베내각의 외교정책은 ‘전략적 외교’,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외교’, ‘국익을 지키기 위해 주장하는 외교’의 3가지를 기조로 삼고 있으며(2013 시정방침 연설), 일미동맹강화, 근린제국과의 협력강화, 일본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외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주도적·수호자적·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TPP 참여 및 추진의 정치경제는 일본의 경제·안보·정치 전략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분석의 노력은 일본의 지역구상과 행보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기여할 것이다.

투 고 일: 2018년 1월 9일

심 사 완 료 일: 2018년 1월 30일

계 재 확 정 일: 2018년 2월 20일

참고문헌

- 김기석. 2005.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일본 대외경제정책의 딜레마.” 『국가전략』 11(4): 69-97.
- 김길수. 2017. “미국 뺀 새 TPP ‘자유무역 의지’ 재확인...미국 인접국 캐나다 최후 승자 가능성.” 『글로벌이코노믹』(11월 20일). http://news.g-enews.com/view.php?ud=201711200707234139d6eb469fd3_1&md=20171120073021_I (검색일: 2017.12.1).
- 김나은. 2017. “日 아베, 미국 뺀 TPP 추진한다... 5월 11개국 장관급 회의.” 『이투데이』(4월 15일)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1480666#csidx648d1498685b4438bfc192748d7d7a9> (검색일: 2017.12.10).
- 김민석. 2017.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중국 진주목걸이나 미국 다이아몬드냐...한국의 선택은” 『중앙일보』(12월 15일) <http://news.joins.com/article/22206435> (검색일: 2018.2.1).
- 김양희. 2010. “일본의 『포괄적 EPA 기본방침』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 일본의 환태평양파트너십(TPP) 참가는 실현될 것인가.”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0(28): 1-10.
- 김영근. 2013. “일본 민주당의 대외경제정책: 정권교체하의 변용과 지속.” 『日本研究論叢』 38: 165-203.
- 김영채. 2017. “한국무역신문. ‘숨 가쁜 추격’...위협적인 일본의 FTA 행보.” 『한국무역신문』(8월 10일). <http://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4&item=&no=31977> (검색일: 2017.12.10).
- 김용복. 2011. “1990년대 이후 일본정치경제의 위기와 변화.” 『國際政治論叢』. 51(3): 211-233.
- _____. 2013. “일본 TPP 참여의 정치경제-성장, 안보 그리고 동아시아.”

- 『평화연구』 21: 109-138.
- 김종태. 2012. “한국, 중국, 일본의 국가정체성과 서구관: 선진국담론, 일본인론, 신국가주의를 중심으로.” 『동북아리뷰』 4(1): 18-23.
- 김필동. 2007. 『일본 일본인론의 재발견』. 서울: 재이앤씨.
- 김호섭. 2012. “일본의 TPP 정책에 관한 국내논의.” 『日本研究論叢』 36: 236-257.
- 박창건·김용민. 2012. “일본 TPP 참가 논의에 대한 정치경제적 함의: 어쩔 수 없는 찬성” 『新亞細亞』 19(2): 264-267.
- 박철희. 2017. “국제정치이론으로 본 한일의 동아시아 전략: 유사성과 편차.” 『한국과 일본의 지역 전략과 한일협력에 대한 함의』. 현대일본학회·화정평화재단·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공동주최 2017 한일관계세미나 공개발표회 발표문. 2017년 11월 8일. 서울대학교.
- 서승원. 2017. “아베정권 시기 일본의 대중국 전략적 사고·관념화된 외교와 강대국간 지정학 게임의 불편한 동거.” 서승원 편저. 『중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pp. 290-327. 서울: 트리팩.
- 안용현. 2014. “시진핑 진주목걸이 外交 전략, 아베의 ‘안보 다이아몬드’와 충돌.” 『조선닷컴』(9월 17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9/17/2014091700245.html (검색일: 2018.2.1).
- 윤덕민. 2013.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대중전략.” 『전략연구』 59: 65-94.
- 이면우. 2011. 『현대일본외교의 변용과 한일협력』. 서울: 한올아카데미
- 이상현·김종인·정대희·안수정. 2015.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농업분야 협상결과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pp.1-23.
- 이승주. 2017. “불확실성 시대의 국제정치경제-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 『국제정치논총』 57(4): 237-271.
- 이원덕. 2011. “일본의 동아시아 공동체전략과 한일관계.” 한상일·이종숙 편. 『일본과 동아시아 -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상』. pp.243-266.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 이종인. 2017. “일본이 주도하는 CPTPP 추진의 정책적 시사점.” 『이슈 브리프 ISSUE BRIEF』 IB 2017-14. 여의도연구원.
- 임재환. 2016. “일본의 위협인식의 변화와 방위체제의 재정비.” 박철희 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반도』. pp.47-71.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전진호. 2005. “일본의 대미 기축외교의 재정립: 추종과 자율의 사이에서.” 한상일·김영작 외. 『일본형 시스템: 위기와 변화』. pp.151-181. 서울: 일조각.
- 정재민. 2017. “트럼프 퇴장하니 아베가 선봉에.” 『시사IN』(11월 29일).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30632>(검색일: 2018.2.1.).
- 조정란. 2017. “TPP와 일본 통상정책.”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연구총서』. pp.1-62.
- 최은미. 2010. “미국의 외교정책이 전후처리에 미친 영향 연구: 독일과 일본의 전범처리와 국가간 배상 사례를 중심으로.” 『동아연구』58: 51-89.
- _____. 2015. “1990년대 일본 장기불황의 정치경제: 낮은 정책유연성과 경제개혁의 한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7. “자유주의 수호에 앞장 선 일본.” 아산정책연구원. 『ASAN 국제정세 전망 2018 비자유주의의 국제질서』. pp.51-55.
- 최희식. 2011. “TPP를 둘러싼 일본 국내 정치적 배경 분석 및 평가.” 『코리아연구원 특별기획: TPP와 동아시아, 분석 및 제언』 36: 1-6.
- 하영선·김영호·김명섭 공편. 2005. 『한국외교사와 국제정치학』. 서울: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 헤럴드경제. 2017. “[獨·日정상 CeBIT 회동] 메르켈-아베 “자유무역 수호”…트럼프의 보호무역에 견제구”(3월 19일).

川崎研一(가와사키 켄이치). 2017. “台頭する地域統合の不確実性-代替的な地域貿易協定シナリオの経済効果- (Emergent Uncertainty in Regional Integration - Economic impacts of alternative RTA scenarios).” *GRIPS Discussion Paper*. pp.16-27.

經濟産業省(경제산업성). APEC 設立経緯. http://www.meti.go.jp/policy/trade_policy/apec/history/organize.html(검색일: 2018.1.30.).

国家安全保障會議(국가안전보장회의). 2013.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

内閣官房(내각관방). 2010. “包括的經濟連携に関する検討状況.” (2010. 10. 27.) <http://www.mofa.go.jp/mofaj/gaiko/fta/pdfs/siryou20101106.pdf>

内閣官房(내각관방). 2012. “説明資料 (TPPをとともに考える地域シンポジウム).” (2012.3). <http://www.mofa.go.jp/mofaj/gaiko/tpp/index.html>

首相官邸(수상관저). 2009. “鳩山総理によるアジア政策講演アジアへの新しいコミットメント-東アジア共同体構想の実現に向けて-.” <http://www.kantei.go.jp/jp/hatoyama/statement/200911/15singapore.html>(검색일: 2018.2.1.).

首相官邸(수상관저). 第176回国会における菅内閣総理大臣所信表明演説. (2010.10.1.) <https://www.kantei.go.jp/jp/kan/statement/201010/01syosin.html> (검색일: 2018.2.1.)

言論(언론)-NPO. 2016. 第12回日中共同世論調査. (2016.9.23.).

外務省(외무성). 2006.“東アジア共同体構築に係る我が国の考え方” http://www.mofa.go.jp/mofaj/area/eas/pdfs/eas_02.pdf(검색일: 2018.2.1.).

外務省(외무성). 2013. “日美首脳會談.” www.mofa.go.jp/mofaj/kaidan/s_abe2/vti_1302/us.html

外務省(외무성). 2017. 『外交清書』.

<http://www.mofa.go.jp/mofaj/gaiko/bluebook/2017/html/index.html>
財務省(재무성). “輸出相手国上位10カ国の推移(年度ベース).” Trade
Statistics of Japan. [http://www.customs.go.jp/toukei/suii/html/
data/fy4.pdf](http://www.customs.go.jp/toukei/suii/html/data/fy4.pdf)

鳩山由紀夫(하토야마 유키오). 2009. “私の政治哲學.” *VOICE*. pp.132-141.

Bloom, William. 1993. *Personal Identity, national identit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pbell, David. 1998. *Writing Security: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and the Politics of Identity*.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Crone, Donald. 1993. “Does Hegemony Matter? The Regionalization of the Pacific Political Economy.” *World Politics* 45(4): 501-525.

Drake-Brockman, Jane; Stephenson, Sherry, and Scollay, Robert. 2011. “The TPP - Opportunity for a New Approach to Services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sation?” PECC-ADB Conference. “Services Trade: New Approaches for the 21st Century.” Hong Kong: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Gregory, Julia. 2018. “Britain exploring membership of the TPP to boost trade after Brexit.” *The Guardian* (January 3).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8/jan/03/britain-in-talks-t
o-join-the-tpp-to-boost-trade-after-brex](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8/jan/03/britain-in-talks-to-join-the-tpp-to-boost-trade-after-brex)(검색일: 2018.1.8.).

Kim, Jemma. 2013. “Japan’s Choice: TPP Rule Setter or Follower?.” *EAI Issue Briefing* 2: 1-10.

Kuniko Ashizawa. 2013. *Japan, the US, and Regional Institution-Building in the New Asi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New Zealand Foreign Affairs & Trade. 2006.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TPSEP or P4).” <https://www.mfat.govt>.

nz/en/about-us/who-we-are/treaties/trans-pacific-strategic-economic-partnership-tpsep-or-p4/(검색일: 2018.1.8).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17. "The United States Officially Withdraws from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7/january/US-Withdraws-From-TPP>(검색일: 2018.01.08).

Pempel, T.J. 1999. "Regional Ups, Regional Downs." T.J. Pempel, ed. *The Politics of the Asian Economic Crisi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Petroff, Alanna. 2018. "The Pacific trade deal Trump quit is back on." *CNN Money* (January 23). <http://money.cnn.com/2018/01/23/news/economy/trade-deal-tpa-agreement/index.html>(검색일: 2018.2.1.).

Petri, Peter A., Plummer, Michael G.. 2017. "US Must Get Back into the Game in the Asia Pacific."(October 23).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https://pie.com/commentary/op-eds/us-must-get-back-game-asia-pacific>(검색일: 2018.2.1.).

Petri, Peter A., Plummer, Michael G., Urata, Shujiro, Zhai, Fan. 2017. "Going It Alone in the Asia-Pacific: Regional Trade Agreements Without the United States" Working Paper 17-10.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ramuk, Jacob. 2018. "Trump: I would reconsider a massive Pacific trade deal if it were 'substantially better'." *CNBC*. (January 25). <https://www.cnn.com/2018/01/25/trump-says-he-would-reconsider-trans-pacific-partnership-trade-deal.html> (검색일: 2018.2.1.)

Smith, Anthony D. 1991. *National Identity*. Reno, NV: University of Nevada Press.

Suny, Ronald G. 2000. "Provisional Stabilities: The Politics of Identities in Post-Soviet Eurasia." *International Security* Winter 1999/2000

24(3): 139-178.

Abstract

Japanese Political Economy in Progress of TPP:
from the Perspectives of Japanese National Identity and Regional
Initiative

CHOI, Eunmi
The Sejong Institute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which has been led by Japan and the United States, lost the momentum as President Trump officially withdrew the United States from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nd ‘TPP without US’ raised doubts on its effect and sustainability. But,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declared that ‘TPP 11 without US’ will be continued; As of January 2018, the pact continues in the form of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CPTPP), under Japan’s proactive and enthusiastic role. What are the reasons for Japan to promote TPP, a symbol of US-Japan cooperation in such proactive and enthusiastic manner even without the United States? More fundamentally what motivates Japan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US instead of China, major trading partner within the region?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changes of Japan’s national identity, regional recognition, and regional initiative in the historical context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further, investigate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conomic benefits and security interests that could result from participation and continuation of TPP from Japan's standpoint.

Keywords: Japanese political economy, national identity, regional initiative, TPP, CPTPP, TPP 11